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9.2(금) ~ 2022.9.7(수)

제공일시 2022 09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9.2(금) ~ 2022.9.7(수)

제공일시 2022 09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위기 시 기업생산에 직접관여... “코로나 때 같은 공급난 방지”

-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시 발생한 공급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위기 발생 시에 기업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인 내수시장 위급상황 체제를 제안할 예정임
- EU집행위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에 주요 물품에 대해 전략적 재고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 내 생산 라인의 전용과 생산 확대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계획임
- 극단적인 위기 상황은 지정학적 위기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을 말하며, EU 내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에 더해, 기업들이 어떤 물품을 먼저 생산해야 할지도 규정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만약 해당 규정을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거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거스를 수 있음

(연합뉴스, 2022.09.03) 이윤 기자

2. “EU 에너지장관, 오는 9일 긴급회의서 러 원유 가격상한제 논의”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에너지부처 장관들이 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에너지의 가격 상한제 등 전력 시장 대책을 논의함
-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에너지 장관들은 유럽 산업을 강타하고 있는 에너지 및 전력 가격의 급등과 가계비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머리를 맞댔음
- 로이터는 각국 장관들이 수입 가스 및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현재 EU의 전기 가격 설정 체계에서 일시적으로 가스 발전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음
-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가 작성한 초안에는 “장관들은 매우 높은 마진 요구에 직면한 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에게 범유럽 신용한도 긴급 지원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전력 파생상품 거래 중단 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2022.09.05) 김민경 기자

3. 유럽, 에너지 위기에 탄소시장 예비비 사용계획에 네덜란드 반대 경고

-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끝내기 위한 목표로, 유럽 탄소시장의 ‘시장안정 예비비’를 사용해 200억유로를 새로운 에너지 투자를 위해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네덜란드는 유럽 전체의 기후변화 정책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 EU가 자금지원계획을 발표한 날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은 10%나 떨어졌으며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친기후 강경그룹은 유럽연합의 이 계획에 반대하며, 자칫 EU의 탄소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함
- 네덜란드는 로이터에 ETS 시장 안정 예비장치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음
- 네덜란드 정부는 대신 할당 허용량 1억2500만 유로를 매각하고, 100억 유로를 조달하며, 이중 절반은 올해 말 매각예정인 할당 허용량 판매를 앞당기고, 나머지 절반은 녹색기술 지원을 위한 혁신기금으로 쓰자고 주장함

(Reuters, 2022.09.07) Kate Abnett 기자

1. 네덜란드, 고기 광고 금지 추진… “소비 줄여 기후위기 대응”

- 러시아발(發) 에너지 대란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해 유럽 일각에선 배출권 거래제 중단 요구까지 나오고 있음 (한스경제, 2022.09.07) 양세훈 기자
- 유럽탄소배출권(EUA)의 t당 선물 가격은 이달 2일 기준 77유로였는데, 열흘 전 100유로였고, 영국 탄소배출권(UKA)도 비슷한데, 8월 초 t당 80파운드 초반이었다가 이달 2일 95파운드까지 한 달 사이 18% 넘게 폭등했음
- 가스 공급 제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IETA)에 거래제를 중단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음
- 일단 EU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배출권 가격안정화 장치’를 활용해 배출권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며 이는 할당량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2. 널뛰는 가격에 거래 중단 요구…흔들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측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 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음 (한국경제, 2022.09.04) 성상훈 기자
-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프랑스 티머만 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알렸음
- 한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총 3번의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음
- 또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과 공조방안을 논의했음

3. EU, 석유·원전 업체들에 ‘횡재세’ 부과 추진

- 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들에 일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음 (파이낸셜뉴스, 2022.09.07) 송경재 기자
-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적하는 ‘천문학적인’ 에너지 요금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화석연료 생산업체들을 포함해 높은 전력 요금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저탄소배출 발전업체들도 부과대상임
- 천연가스요금이 높아지면서, 전력요금 도매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업체들까지 덩달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며 횡재세 대상에 포함시켰음
-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소 등도 부과대상임 집행위는 이와 함께 가스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화력발전업체 자금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도 추진하고 있음

1. 내년 주식매수청구권 도입...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분할 목적과 주주 보호 방안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고,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상장 예상 일정을 공시해야 함
- 또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해 미흡 할 경우 상장이 제한됨
-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했더라도, 분할 후 5년 이내 기업도 강화된 상장심사제도가 적용됨
- 공시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며,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위한 '주식매수 청구권'도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임

(이데일리, 2022.09.04) 김소연 기자

2. '집' 밖으로 나가는 건설사...친환경 사업에 눈독

- SK에코플랜트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제조업체인 삼강엠앤티를 인수하고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어센드엘리먼트에 약 700억원을 투자했음
- 어센드엘리먼트는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음
- GS건설은 핀란드 바이오 에너지 업체인 St1과 열대 식용작물인 카사바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 사업에도 진출했음
- 또 DL이앤씨는 캐나다 테레스트리얼에너지와 SMR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SMR와 CCUS를 미래 사업으로 낙점했음

(한국경제, 2022.09.05) 김은정 기자

3. 유제철 환경부 차관 “폐플라스틱 열분해, 2030년 10% 이상도 가능”

- 환경부 차관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 이상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을 개정,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고, 산통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석유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 설치검사 항목 20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정기검사 항목도 8개에서 6개로 간소화함 열분해유 생산은 '정유업' '석유화학업' '폐기물 처리업'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시 허용과 불허가 혼재돼있었는데, 통계청 내 열분해유 생산활동 산업분류코드도 확정함
-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2020년 기준 연간 1만톤에서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해 처리 비중을 0.1%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품의 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 지표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한다고 밝혔음

(전자신문, 2022.09.05) 이준희 기자

1. 물…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자원 취급

- 물이 이제는 귀하고 필수적이며 부족한 글로벌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가스 인프라 기업 스남(Snam)의 최고경영자 스테파노 베니에르가 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물과 에너지 간 생산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물의 가치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에너지 공급은 물에, 물 공급은 에너지에 달려있으며 수년 내 상호 의존이 커져서 물 안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이미 유럽에서는 물과 관련된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원자력 발전소는 강물 수위가 줄면서 냉각수 부족에 전력 생산을 줄이고, 노르웨이는 저수지 수위가 줄면서 수력발전 전력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임

(파이낸셜뉴스, 2022.09.07) 윤재준 기자

2. [해운·항공업계 기후변화 해법 찾기] 수소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청정 항공’ 현실화하나

- 글로벌 비행기 제조사들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청정 항공’을 위해 수소 비행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어버스가 본거지인 프랑스 툴루즈의 거대한 부지 한편에서 세계 최대 여객기 A380 1호기에 수소 엔진을 장착하는 개조 작업을 진행함
- 미국 보잉도 전기 배터리에서 수소,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에 이르기까지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 모색하고 있음

(이투데이, 2022.09.05) 김나은 기자

3. GS건설, 탄소포집의 핵심기술 ‘차세대 분리막’ 개발한다

- GS건설이 탄소 포집 플랜트의 핵심인 분리막 기술 개발에 나섰다
- GS건설은 30일 권혁태 GS건설 RIF테크 전무와 하성용 에어레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리막 기반 탄소포집 및 활용 기술 교류와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 양사는 탄소포집 분리막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나아가 탄소포집 플랜트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헤럴드경제, 2022.09.05) 양영경 기자

4. 코오롱글로벌, 첫 해상풍력 발전사업 '완도 장보고' 허가 취득 / SK에코플랜트, 글로벌 기업들과 2.6GW 규모 해상풍력 공동개발

- 코오롱글로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비 2조원, 400MW(메가와트) 규모의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향후 상업 운전 시 연평균 120만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됨
- 코오롱글로벌은 총 932MW 규모의 전국 2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선도해왔으나, 육상풍력 발전의 한계로 이제 해상풍력 진출을 시도했으며,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첫번째 성공사례로 보임
-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 이하 코리오)과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음
- 양사가 추진하는 '바다에너지' 지분을 확보, 울산광역시와 전남 등 5개 권역의 2.6GW(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고정식 해상풍력 사업 지분을 확보하게 됨

(머니투데이, 2022.09.07) 방윤영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9.2(금) ~ 2022.9.7(수)

제공일시 2022 09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넷제로 목표, 지속가능금융 달성한다 했지만 그린워싱 의혹... 탄소중립 정책 주춤해도 “일시적인 현상”

-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연합(AEPW)이 그린워싱 혐의를 받고 있음. AEPW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2019년 출범함. AEPW는 글로벌 플라스틱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모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과 전문 지식, 자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함
- 회원사는 65곳으로, 엑손모빌, 셸과 같은 빅오일, 바스프, 다우와 같은 화학기업, 베리(Berry), 실드에어(Sealed Air)와 같은 포장 및 용기 회사, 펩시코와 P&G를 포함한 소비재 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 AEPW를 저격한 장본인은 글로벌 금융 싱크탱크 ‘플래닛 트래커(Planet Tracker)’는 AEPW가 목표와는 달리 플라스틱 정책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교한’ 형태의 그린워싱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예를 들면, 인도의 갠지스강을 청소하는 ‘리뉴 오션스(Renew Oceans)’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1년 후인 2020년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됨. AEPW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 운용사 롬바드오디에(LOIM) 5억달러(6878억원) 규모의 순환 플라스틱 펀드를 출시함. 플래닛 트래커는 5억달러가 AEPW의 목표인 15억달러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함
- AEPW는 연간 300만 톤을 5년 동안 줄일 계획을 세웠고, 2023년까지 900만 톤을 줄여야 함. 플래닛 트래커는 AEPW의 목표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볼 때, 미미한 수준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음
-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회원사가 늘어났음에도 상향되지 않아서, 회원사당 감축해야 할 목표가 10만 4000톤에서 4만7000톤으로 56%가 줄어들음. 트래커는 AEPW의 회원사 중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10곳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3년간 3200만 톤을 생성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99.99%를 제거하거나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회원사가 늘었지만 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투자금은 늘지 않음. AEPW는 2020년 9월까지 4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15억달러 목표의 27%임. 보고서는 현재 목표의 0.04%가 달성된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치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지속가능성 전문 미디어 에디(edie)에 따르면, 존 윌리스 플래닛 트래커 연구 책임자는 “AEPW라는 조직은 최소한 자체 생성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은 오히려 플라스틱 생산을 확대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재생 및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이 오히려 그린워싱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SFDR을 설계한 유럽의회 폴 탕(Paul Tang) 의원은 “SFDR이 신뢰도와 그린워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그는 FT에 “규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의도에 너무 벗어났으며, 대신 마케팅 라벨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함
- 탕 의원은 SFDR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함. 투자자들은 기업의 유해 폐기물 생산, 생물 다양성 핫스팟에 대한 자산의 근접성, EU 탄소노미와 일치하는 자산의 비율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공개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함

(임팩트온, 2022.09.14) 박지영 기자

(임팩트온, 2022.09.07) 송준호 기자

(임팩트온, 2022.09.07) 박지영 기자

- 이런 현실에서 오히려 SFDR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면 그린워싱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규칙에 따라 정보를 게시하면,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신호로 고객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금융 서비스 부서의 자산 관리 책임자는 이미 작년에 “SFDR 분류가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일종의 라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함.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의 휴고 켈러거 수석 정책 고문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의견을 밝힘
- 한편 그린워싱,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속도를 냈던 탄소중립 정책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은 "결국 탄소중립은 가야할 길"이라며 "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봄**
-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후퇴 움직임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후위기로 물리적 리스크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한국은행이 1일 내놓은 <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옴. 한국은행은 “중국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및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중국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주요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이후 탄소 정책에 속도를 냄.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올해 기준 중국 내 전력 생산의 약 11%를 차지함.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84%, 전지는 85%, 웨이퍼는 97%로, 미국 포브스지는 중국이 향후 석유시장에서 OPEC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일자리 증가 효과도 가져옴. IEA는 중국의 탄소감축 속도에 따라 2019~2030년 중 60만개에서 최대 20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봄
- 한국은행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 투자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했다”며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함